
2019년 민간위탁실태 특정감사



강 원 도
(감 사 위 원 회)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쪽)	소 관	시행 연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요구양정
					내역	금액 (천 원)	
			계 : 8건	계 8 시정 5 주의 3	계 회수	13,187 13,187	계 * 훈 계 *
1	◆◆시 (♣과)	'16~'19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현 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 위탁 지도감독 소홀	주의			훈 계 *
2	◆◆시 (◎과)	'16~'19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관 리·운영 민간위탁 부적정	주의			훈 계 *
3	◆◆시 (☆과)	'16~'19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지도·감독 등 소홀	주의			-
4	◆◆시 (○과)	'16~'19	♠♠센터 위탁심사 부적정 및 운영 지도·감독 소홀	시정			-
5	◆◆시 (○과)	'16~'19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도·감독 소홀	시정	회수	723	-
6	☐☐군 (◇소)	'16~'19	야생조수류 보호사 민간위탁 지도감독 소홀	시정	회수	2,980	-
7	☐☐군 (◇과)	'16~'19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지도감독 소홀	시정	회수	1,200	-
8	☐☐군 (◎과)	'16~'19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심사 부적정 및 운영 지도· 감독 소홀	시정	회수	8,284	-

[일련번호: 1]

강 원 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지도감독 소홀

기 관 명 ◆◆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시 ♣과 지방◆◆ A

내 용

◆◆시(♣과)에서는 행정효율 증대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유지를 목적으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를 1998. 3. 19.부터 현재까지 강원도★★협회 ◆◆시지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 A은 2018. 8. 27.부터 현재까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수탁자 선정 업무 실무자로 근무하였다.

1.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절차 미이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시장은 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그 밖에 안전점검

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시 △△공단, 그 밖에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공증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시(♣과)에서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하고, 수탁자를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고,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과)에서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를 민간위탁 하면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1998. 3. 19.부터 2019. 6. 26. 재계약분¹⁾까지 21년간 강원도★★협회 ◆◆시지부와 3년 단위로 민간위탁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계법령²⁾ 및 조례³⁾에 따른 건축사, 건축사 관련 단체, ◆◆시 △△공단, 그 밖에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등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위탁계약서 내용도 공증을 하지 않았다.

2. 대행료 수입금 지도·감독 소홀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2 및 제13조에 따르면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 위탁 계약서” 제9조에는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정해진 현수막 신고 수수료를 강원도★★협회 ◆◆시지부가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제16조 제2항에는 현수막게시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행료”라 한다)에 대하여 강원도★★협회 ◆◆시지부는 시장에게 징수한도액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7조에 따르면 대행료 수입은 현수

1)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 민간위탁 관리 계획(♣과-6548(2019. 6. 11.)호)에 따라 위탁기관 지정 및 계약 체결(2019. 6. 26.) * 위탁운영 기간 : 2019. 7. 1. ~ 2022. 6. 30.(3년)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3)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4조, 제15조, 제16조

막게시대의 유지관리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수막게시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 잔여 금액은 인건비 및 강원도★★협회 ◆◆시지부의 육성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시(♣과)에서는 수탁자가 현수막 신고 수수료를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징수·납입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점검 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수입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대행료는 징수한도액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해 주어야 하며, 승인한 대로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과)에서는 연 2회 수탁자로부터 위탁금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 검사하는 것으로 수탁자에 대한 감사를 대체하고 있으며,

수탁자가 제출한 정산서를 확인한 결과, 대행료 수입금이 얼마인지는 확인할 수 없고, [표 1]과 같이 2016년도에는 민간위탁금을 교부결정(사전승인)⁴⁾ 했을 때의 자부담(대행료)으로 승인해 준 금액보다 자부담 집행액이 6,114천 원이 더 많아서 사전승인 없이 수탁자가 대행료를 임의 집행한 사실과 2017년 7,847천 원, 2018년 19,389천 원의 대행료 수입금이 사전승인된 금액보다 적게 집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시(♣과)에서는 강원도★★협회 ◆◆시지부의 대행료 수입금의 징수액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수탁자가 제출한 집행내역만으로 주로 위탁금에 대한 정산검사만 실시하는 등 대행료(수입)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1] 위탁금 정산현황

(단위: 천 원)

4) 위탁계약서 제16조(필요경비의 징수) ② 현수막게시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행료”라 한다.)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징수한도액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도별	예산액(사전승인)(㉠)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위탁금	자부담	계	위탁금	자부담	계	위탁금	자부담	
총계	444,144	90,000	354,144	412,506	90,000	322,506	31,638	0	31,638	
2016	65,070	15,000	50,070	71,184	15,000	56,184	-6,114	-	-6,114	
2017	148,492	30,000	118,492	140,645	30,000	110,645	7,847	-	7,847	
2018	153,002	30,000	123,002	133,613	30,000	103,613	19,389	-	19,389	
2019	77,580	15,000	62,580	67,064	15,000	52,064	10,516	-	10,516	미정산

3. 민간위탁 사무편람 미작성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시(♣과)에서는 수탁자인 강원도★★협회 ◆◆시지부가 감사일 현재까지 사무편람을 미작성하고 있는데도 수탁자에게 사무편람의 작성 및 승인 신청을 독려하지 않은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훈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 A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2019. 7. 1. 이후에 발생한 대행료 수입금에 대해서는 징수한도액을 사전승인해 주고 수입금이 승인된 징수한도액 내에서 집행되도록 하고, 대행료 수입금이 현수막게시대의 유지관리 외에 사용되거나 계약사항에 위배 되는 일이 없도록 대행료 수입금과 위탁금의 정산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수탁기관에서는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비치하도록 하고,
- ③ 앞으로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공개모집 절차를 이행하여 “옥외
광고물 안전점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유자격자
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적격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협약서의 내용은 공중
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강 원 도

훈계·권고 요구

제 목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부적정

기 관 명 ◆◆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시 ○과 지방○○ B

내 용

◆◆시(○과)에서는 묵호항 내 수산물 공동할복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항내 유입에 따른 수질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설치한 공동폐수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3. 6. 24. ◆◆시 ◆◆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와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운영비의 50%(156백만 원)을 위탁 관리비로 지원하고 있다.

지방○○ B은 2018. 4. 1.부터 2018. 12. 31.까지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업무 실무자로 근무하였다.

1.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미이행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2001. 9. 29.일부개정 조례 제 1233호)(“舊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라 한다)에 따르면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공증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시(○과)에서는 위 조례에 따라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시설 관리운영 업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수산물공동할복장의 사용권자인 ◆◆협회를 수탁자로 지정하여 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12. 감사일 현재까지도 협약내용을 공증하지 않고 있다.

2. 수탁기관의 재위탁 부적정

舊 「지방재정법」(법률 제6400호, 2001.1.29.타법개정) 제10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舊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시(○과)에서는 2003. 6. 24. “◆◆시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시설 관리운영 대행위탁 계약서” 제4조에 대행시설물의 사용은 무상으로 하되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협회가 부담하고, 직영으로 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연간 운영비의 50%를 ◆◆시가 보조지원하고, ◆◆협회가 제3자와 위탁계약 체결 운영 시 적정한 계약금액의 50%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아 수탁자인 ◆◆협회가 제3자와 위탁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관리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탁자인 ■■■협회에서는 위 위탁계약을 근거로 2003. 7. 1. ■■■시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이 가동된 이래 2018. 7. 30. 시설관리 운영을 재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하겠다고 변경 계획을 ■■■시(○과)에 제출하여 ■■■시(○과)에서 2018. 8. 13. 변경승인이 있을 때까지 폐수처리 전문업체인 (주)▽▽에 재위탁하여 공동폐수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였다.

3. 위탁기간을 준영구로 체결한 계약 부적정

舊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타법개정) 제84조의2에 따르면 법 제82조 제1항 제1호⁵⁾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위탁된 공공시설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舊 「국유재산법」(법률 제6560호, 2001. 12. 31. 타법개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허가 기간이 종료된 재산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허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되, 갱신할 때마다 3년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시(○과)에서 2003. 6. 24.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시설을 관리위탁할 때에는 ■■■협회가 舊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것으로 보고 舊 「지방재정법」 등에 명시되지 않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舊 「국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을 하여야 했다.

5) 「지방재정법」 제82조 ①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한편 2005. 8.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지방분권시대에 맞추어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舊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제정되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5. 8. 4. 제정) 제2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05.12.30.제정)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 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 한 후 두 번 이상 갱신 할 수 있고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2017. 4. 28.일부개정) 제7조에는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시(○과)에서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舊 「지방재정법」과 舊 「국유재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등을 검토하지 않고 2003. 6. 24. “◆◆시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시설 관리운영 대행위탁 계약” 제3조에 위탁기간을 2003. 6. 24.부터 준영구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시의 행정재산이 ◆◆협회에 준영구적으로 관리위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위탁금액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미실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0조 제4항 및 <별표4>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제10조 관련)’의 위탁료 산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획 수립을 통해 수입·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시(○과)에서는 수탁자에게 관리위탁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할 때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제출받아 운영실적을 확인하고 손익분석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수탁재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 한하여 필요한 비용 만큼만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과)에서는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관리위탁 계획 수립단계⁶⁾에서부터 2019. 7. 12. 감사일 현재까지 운영비 위탁금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지 않았으며,

원가산정을 통해 수탁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만큼만 지원하도록 하지 않고 관리운영비의 50%를 지원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수탁자인 ◆◆협회와 재위탁자인 폐수전문업체 간의 재위탁 계약에서 결정된 관리운영비 312백만 원의 50%에 해당하는 156백만원(시비)을 매년 실제 운영금액에 관계없이 운영비 위탁금으로 지원하였고,

◆◆시(○과)의 2017년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 결산조서 및 2018년 운영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보고서의 운영비 위탁금 지원액을 살펴보면, 폐수전문업체 재위탁 기간 중인 2003. 7월부터 2018. 6월까지 총 1,840백만 원(시비)를 지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과)에서는 2018. 3. 19. 『2018년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위탁

6) “수산물 공동 폐수처리 시설 준공 및 관리대행 위탁계획 보고” : 해양58160-문서미등록(2003.6.)

- 결재라인 : 과장-국장-◀장- 시장결재

- 관리운영 대행위탁 계약 체결 및 시설물 인수인계

• 위탁계약체결자 : ◆◆시 ↔ ◆◆시◆◆협회장

• 위탁계약 주요내용 : 위탁재산의 보존, 안전사고 책임,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지원,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사용료 지원(추경확보): ◆◆시 ◆◆협회에서는 전문관리업체에 위탁 운영 계획이므로 관리운영비의 50% 지원

관리비 지급 추진계획』에 “향후 2019년 당초예산에 위탁운영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위하여 원가계산용역 실시 후 사업비 지원 → 업체 입찰공고 → 업체 선정 및 운영”을 내용으로 ◀◀장까지 결재를 받고는 실제로는 감사일 현재까지 위탁운영비에 대한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다만, ◻◻협회에서 직영으로 관리운영하기로 한 2018. 7월부터 12월까지는 운영비가 94백만 원이 절감되어 절감액의 50%에 해당하는 시비 47백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조치 하였고, 2019년에는 매년 지원하던 운영비 위탁금 156백만 원에서 76백만 원 절감한 80백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9. 3. 27. 위탁금 교부결정 하였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① “◻◻시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시설 관리운영 대행위탁 계약”의 위탁기간을 준영구로 하는 조항 및 재위탁 체결 관련 조항은 위탁계약 당시 舊 「지방재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타법개정) 및 舊 「국유재산법」(법률 제6560호, 2001. 12. 31. 타법개정), 舊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입법취지에 위배된 위탁계약에 해당 되고, 현재는 ◻◻시 오징어 어획량 감소에 따른 오·폐수 배출량 감소 등 폐수처리 환경이 변화하였으므로 위탁기간 준영구 계약은 위탁관리취소 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② ◻◻시 공동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기술적 운영을 ◻◻시(☉과) 직영체제 혹은 적절한 폐수처리전문업체로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민간위탁 하시기 바랍니다.

③ 또한 ◆◆시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시설을 민간위탁 할 때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원가계산을 실시하고, 폐수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강 원 도 주의 요구·권고

제 목 교통약자 교통특별수단 운영 민간위탁 지도·감독 등 소홀

기 관 명 ◆◆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시(☆과)에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표 1]과 같이 ◆◆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 현황

수탁기관	위탁기간	위탁사무 범위	위탁조건
(사)ⓈⓈ협회 강원도협회 ◆◆시지회	2016.6.1.~2018.5.31.	- 차량관리 및 운영 - 이용요금 수납 등 회계업무 - 운행기록 대장 작성·관리 등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경비(인건비, 차량 유지비 등) 지원
(사)▼▼협회 강원도지부 ◆◆시지회	2018.6.1.~2020.5.31.	"	"

1. 수탁기관 모집 공고 선정기준 등 누락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인이 사업계획서 작성, 관계서류 준비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과)에서는 2018. 5. 3. 공고한 ‘◆◆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 모집공고’에 선정기준과 배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 선정은 ◆◆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신청 대표자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 등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심의위원회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최고점수를 획득한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고 동점 발생시 심사기준 항목의 순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고만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심사기준 항목, 선정기준과 배점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심의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부적정

◆◆시(☆과)에서는 기존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기관의 협약기간이 2018. 5. 31. 종료됨에 따라 ‘◆◆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 모집공고(◆◆시공고 제2018-457호, 2018.5.3.)’를 하였고, 2개⁷⁾ 기관에서 신청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의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해당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수는

7) 사단법인 ○○협회 강원도협회 ◆◆시지회, 사단법인 ▼▼협회 강원도지부 ◆◆시지회

그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시(☆과)에서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표 2]와 같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총 7명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면서 관계공무원 3명을 임명하여, 총수의 3분의 1이 초과되게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표 2]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시청	◀◀장	C	임명
위 원	◆◆시청	◆◆장	D	"
위 원	◆◆시청	♡♡장	E	"
위 원	◆◆시의회	의원	F	위촉
위 원	◆◆시◆◆협의회	회장	G	"
위 원	◁▷연합회	회장	H	"
위 원	●●대학교	조교수	I	"

3.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 및 위탁사실 공고 미이행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하며,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탁기관에서는 위탁사무 협약서에 대한 공증을 실시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 시설장비의 회수, 계약내용 이행, 수탁자와의 분쟁 방지 등 협약내용에 대한 이행 확보를 위한 공증력을 갖도록 하여야 하고,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후 해당 사무의 위탁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과)에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과-36961, 2018. 5. 28.)’ 문서에 위·수탁 계약내용 공증 및 공고를 2018. 5. 31.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수탁기관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대한 공증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위 사무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협회 강원도지부 ◆◆시지회에 위탁하였다는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4.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소홀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과)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위탁기간동안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한 정산검사만 실시하는 등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5.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기관 사무처리지침 미수립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시장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수탁기관에서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

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업무추진 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업무처리 절차,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관리 등 민간위탁 회계처리기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사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과)에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사무처리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탁기관에 사무처리 지침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위탁사무의 신청자격이 공고일 현재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관련단체와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되어 있음에도, 현재 장애인단체가 위탁자로 선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차량 운전기사 인건비를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등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수탁 계약 시 보조금 관련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정산하고 있는 바, 민간위탁 사무의 공통 회계처리 기준 등을 포함한 표준화된 사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주의] ① 앞으로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위탁기관 모집 공고 및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수탁기관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실시하고 사무의 위탁사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수탁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계적인 업무처리 절차와 예산·회계·물품관리 등 공통 회계처리 기준을 포함한 표준화된 수탁기관 사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강 원 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센터 위탁심사 부적정 및 운영 지도·감독 소홀

기 관 명 ◆◆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시(○과)에서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시 ♠♠센터 민간위탁 개요

□ 위탁경과

- 위탁계획 수립 : 2018. 11. 12.
- 의회 동의 : 2018. 11. 30.
-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 2019. 1. 3.~1. 22. (20일간) * 신청서 접수 : 2019. 1. 23, 1. 28.
- 위탁 심의 : 2019. 1. 30.
 - ※ 심사위원회 : 위원장 ◀◀장, 위원 6명(사회복지담당공무원 1, 돌봄분야 전문가 2, 시의원 1, 공익단체 추천 2)
- 위탁운영자 선정 공고 : 2019. 1. 30.

□ 위탁계약(공증일) : 2019. 2. 22.

- 위탁기간: 2019. 3. 1. ~ 2024. 2. 28.(5년)

□ 수탁자 : ◆◆시◆◆센터(센터장 J)

□ 위탁대상 : ◆◆시 ♠♠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 전반 (사무위탁)

- ※ 위탁시설 : ◆◆시 ■■동행정복지센터 2층

□ 사업예산(2019년) : 59,140천 원(인건비 41,140, 운영비 9,000, 사업비 9,000) /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307-10)

- ※ 위탁비용 : 보건복지부 사업비 예산 내시에 의한 보조금 편성 및 교부

1. ♠♠센터 위탁심사 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3년마다 실시하는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하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이름, 위탁계약기간,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공증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시(○과)에서는 [표 1]과 같이 센터의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탁자 선정 심사표 작성 시 [표 2]와 같이 심사표의 2. 사업계획의 적극성

8)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분야에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의 배점기준이 차량운행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공고문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운영비 재정 부담 능력”에서 세입을 예측할 수 없는 후원금을 재정능력 평가기준으로 하였으며, 2017년 보건복지부 시설(●●센터)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등 심사표를 부정하게 작성하였다.

[표 2] ●●시 ♠♠센터 민간위탁 심사표

구분 총점	평가항목		심사기준			비고
	항목별	배점	세부항목		점수	
2. 사업계획의 적극성 (40점)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10	O 유관기관과의 관계 구축 방안, 자원 동원 및 활용 능력 (차량운행)	승합 차량	10	차량에 대한 사항 미공고
				소형 차량	5	
				무	0	
	운영비 재정 부담능력 (자부담, 후원금)	15	O 10,000천원 이상		15	
			O 5,000천원~10,000천원 미만		10	
			O 5,000천원 미만		5	

※ ●●시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심사표 별첨

2. ♠♠센터 운영 지도·감독 소홀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 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고, ♠♠센터의 이용료 수납한도액

은 월 10만원(아동 1인당) 한도 내에서 지역여건 및 제공서비스 등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며, 돌봄센터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향상을 위해 돌봄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시(○과)에서는 센터에서 징수할 이용료 수납한도액을 정하여 시설에 통보하지 않았고, 센터에서 사무편람 또는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표 3]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하면서 위원 중 수탁기관⁹⁾의 사무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임명(위촉)하여 시설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3] ◆◆시 ♠♠센터 운영위원 현황

성명	구분	위원구분	소속 및 직위	임기
K	기관대표	위원장(당연직)	◆◆시 ♠♠센터장	2019.6.24.~2022.6.23
L	수탁기관 대표	위원(당연직)	◆◆시 ☒☒센터 사무국장	2019.6.24.~2022.6.23
M	담당공무원	위원(당연직)	◆◆시청 ○과 담당	2019.6.24.~2022.6.23
N	종사자 대표	위원(당연직)	◆◆시 ♠♠센터 교사	2019.6.24.~2022.6.23
O	학부모 대표	위원	♥♥ 대표이사	2019.6.24.~2022.6.23
P	지역주민 대표	위원	●●협의회 부회장	2019.6.24.~2022.6.23
Q	자원봉사자 대표	위원	경찰관	2019.6.24.~2022.6.23

※ ◆◆시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시장은

[시정] ① 센터의 이용료 수납한도액을 정하여 시설에 통보하시고, ② 센터에서 제정한 사무편람 또는 운영규정에 대해 승인하시기 바라며, ③ 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중 수탁기관 대표에 대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재위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시설 민간위탁 심사 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9) ◆◆시 ◆◆센터(센터장 J)

[일련번호: 5]

강 원 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센터 운영 지도·감독 소홀

기 관 명 ◆◆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시(○과)에서는 지역사회의 가족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보편적·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센터장 비상근 부적정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해야 하며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센터장은 상근이 원칙이나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비상근(겸직)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시(○과)에서는 [표 1]과 같이 센터의 센터장이 비상근을 해야

하는 사유가 없고, 2016. 12. 14.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2019. 7. 12. 감사일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1] **◆◆시 ◆◆센터 센터장 현황**

시설명	센터장명	상근여부	자격기준	경력	비상근 사유
◆◆시 ◆◆센터	J (53.9.27)	비상근	관련사업 7년이상 실무경력자	◆◆시 ▣▣▣과장 등 7년 이상 근무	해당없음

※ ◆◆시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2.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통합서비스 사업안내」(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센터의 모든 수입 및 지출관리는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며 예산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와 계좌이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출결의서는 내부 결재를 득하되 지출내역은 6하 원칙에 맞추어 기재하고 예산 집행 시 청구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예산 편성 시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비에 비상근 센터장의 활동비¹⁰⁾는 월 70만원 이내(선지급 불가)에서 직원 격려, 업무상 외부인사 접대, 교통비(유류비) 등으로 편성하고, 회의비 중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센터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부서운영경비를 월 30만 원 이내에서 편성하여 집행하도

10) 지출증빙서류 첨부(법인카드 처리 원칙)하며, 업무를 위한 교통비(유류비 포함)는 출장여비로 처리

록 적정 예산편성 과목 및 내역¹¹⁾이 정해져 있으며, 여비¹²⁾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시(○과)에서는 [표 2]와 같이 센터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면서 센터장 활동비와 부서운영비를 세출예산 과목별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하였고,

[표 2] 2018년 세출예산 한도 초과 집행 현황

(단위 : 원)

과목명	집행일	적요	지출금액	초과집행 내역
기관운영비(센터장활동비)				
2월			823,000	123,000원 초과 집행
기관운영비	20180205	비상근센터장활동비	44,000	
기관운영비	20180210	비상근센터장활동비	550,000	
기관운영비	20180228	비상근센터장활동비	50,000	
기관운영비	20180228	비상근센터장활동비	179,000	
9월			708,940	8,940원 초과 집행
기관운영비	20180913	비상근센터장활동비	18,960	
기관운영비	20180918	비상근센터장활동비	549,980	
기관운영비	20180919	비상근센터장활동비	140,000	
12월			708,000	8,000원 초과 집행
기관운영비	20181217	비상근센터장활동비	36,000	
기관운영비	20181220	비상근센터장활동비	112,000	
기관운영비	20181220	비상근센터장활동비	560,000	
기관운영비(부서운영비)				
12월			301,250	1,250원 초과 집행
기관운영비	20181205	사무실운영비	28,800	
기관운영비	20181217	사무실운영비	180,000	
기관운영비	20181226	사무실운영비	92,450	

※ ◆◆시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세부내역 별첨

또한 [표 3]과 같이 회의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등으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할 세출예산을 기관운영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표 3] 2018년 세출예산 과목 부적정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원)

당초 과목명	적정과목	집행일	적요	지출금액
기관운영비	회의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2018.2.8.~12.11.	센터운영비외 20건	3,829,460

※ ◆◆시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세부내역 별첨

11) 예산 편성 과목 및 내역 별첨

12) 관내 출장과 관외 출장으로 구분하여 관외 출장의 경우 사전결재 득한 출장신청서, 출장 후 출장보고서와 영수증(보조금 결재 전용카드)과 함께 제출

[표 4]와 같이 비상근 센터장의 여비를 집행하면서 1일 관내 출장의 경우에도 적게는 40천 원에서 많게는 94천 원까지 집행하였고, 관외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후 출장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적정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센터장이 제출한 주유비 영수증에 있는 금액대로 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4] 2018년 비상근 센터장 여비 집행 현황

(단위 : 원)

지급 건수	출장 건수	출장목적	출장자	관내/ 관외	출장 보고서	지출금액	지급 내역	적정 여비	차액 (회수금액)
12건	25건	기관방문 등	J	관내 19 관외 6	미첨부	1,480,200	유류비	756,800	723,400

※ ◆◆시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세부내역 별첨

조치할 사항 ◆◆시장은

[시정] ① 현 비상근 센터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거나 비상근이 가능한 센터장으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② 비상근 센터장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여비 723,4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센터 예산 편성 시 지침에 정해진 세출예산 편성과목 및 내역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강 원 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야생조수류 보호사 민간위탁 지도감독 소홀

기 관 명 □□군

관 계 부 서 ◇소

내 용

□□군(◇소)에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표 1]과 같이 □□군 야생조수류 보호사 관리 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군 야생조수류 보호사 운영 위탁 현황

수탁기관	위탁기간	위탁사무 범위	위탁조건
(사)⊕⊕협회 철원지회	2016.5.8.~2019.5.7.	- 야생조수류보호사 운영 - 탈진 등 각종 사고로 인도된 야생조수류 치료 및 보호관리 - 두루미 서식지 등 생태계 보호	- 운영비 보조
(사)⊕⊕협회 철원지회	2019.5.8.~2021.5.7.	"	"

1.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3장 12-3 민간위탁금에 따르면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위탁경비 산출 및 사후정산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같은 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해당사업의 특성상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미응찰 또는 1개 업체만이 응찰하였을 때에는 재공고를 실시하고 재공고 결과 1개 업체만 응찰하였을 경우 응찰한 업체에 대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적정성여부를 심사 받은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소)에서는 2019. 5. 7. 기존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새로운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을 위해 2019. 4. 19. ▣▣군 공고 제2019- 호¹³⁾로 “▣▣군 야생조수류 보호사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2019. 4. 29. ⊕ ⊕협회 ▣▣군 지회(이하 ▣▣군 지회로 한다)에서만 신청서를 제출하여 1개 업체만 응찰하였음에도 지방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군 지회의 민간위탁기관 선정여부를 2019. 5. 2. 민간위탁선정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적격업체로 평가하고 2019. 5. 7. “▣▣군 야생조수류 보호사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함에도 공고하지 않았다.

2.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소홀

▣▣군에서는 야생조수류 보호사 민간위탁 업무를 2016년 \$과에서 2017. 7. 17.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관광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9. 2. 12.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소로 업무가 이관되었다.(이하 관련부서라 한다)

13) 공고번호 없음

「○○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관련부서)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야생조수류 보호사 민간위탁 운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 또한 검토결과 없이 처리하는 등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민간위탁 사무편람 작성·비치 소홀

「○○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군(관련부서)에서는 수탁기관이 야생조수류보호사 위탁운영 사무의 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4. 야생조수류 보호사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2015. 12. 4. \$과-40857호 “2015년 야생조수류보호사 위탁관리 인건비 가이드라인 통보”에 따르면 2015년 12월부터 가이드라인¹⁴⁾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

도록 되어 있고, 2015. 12. 9. 한조협¹⁵⁾ 회군15-19호 “야생조수류보호사 2015년도 12월 인건비 및 2016년 근로계약서 제출의 건”에 따른 의견에도,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매월 배우자 40,000원, 자녀 20,000원(단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셋째이후의 자녀는 월 30,000원을 가산한다.)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016. 1. 12. 당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하며,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가족수당 가산금 월 8만 원씩(다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월 3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2016년, 2017년 ⊕⊕협회 회군지회와 조수류보호사 R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가족수당은 월 120,000원(배우자 40,000원, 자녀 4명 8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근로계약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월 320,000원¹⁶⁾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 제3장 가족수당의 부양가족의 자녀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직계 비속이 이에 포함되므로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회군지회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자녀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표 2]와 같이 총 2,980천 원의 가족수당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고, 매년 정산검사의 책임이 있는 회군(관계부서)에서는 정산을 소홀히 하여 2019. 6월

14) 가족수당: 부양가족은 1인당 월2만원(배우자 4만원)으로 자녀수에는 제한없음

15) ⊕⊕협회

16) 배우자(40,000원), 첫째자녀(20,000원), 둘째자녀(60,000원), 셋째자녀, 넷째자녀(각100,000원)

까지도 가족수당이 지급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협회 ⊞⊞군지회 조수류 관리자 가족수당 지급현황

(단위: 천 원)

연도	구분	생년 월일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초과 지급액
'16	배우자	68.××.××	48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김○○	96.××.××	24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40
	김○○	97.××.××	24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120
	김○○	99.××.××	24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김○○	03.××.××	24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17	배우자	68.××.××	48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김○○	96.××.××	24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40
	김○○	97.××.××	24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40
	김○○	99.××.××	24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김○○	03.××.××	24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18	배우자	68.××.××	48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김○○	96.××.××	24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40
	김○○	97.××.××	72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720
	김○○	99.××.××	1,2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김○○	03.××.××	1,2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	배우자	68.××.××	240	40	40	40	40	40	40	-	-	-	-	-	-	
	김○○	96.××.××	120	20	20	20	20	20	20	-	-	-	-	-	-	120
	김○○	97.××.××	360	60	60	60	60	60	60	-	-	-	-	-	-	360
	김○○	99.××.××	600	100	100	100	100	100	100	-	-	-	-	-	-	600
	김○○	03.××.××	600	100	100	100	100	100	100	-	-	-	-	-	-	

※ 음영 및 진한글씨는 초과 지급액(2,980천원), 지급명세서 재구성

조치할 사항 ⊞⊞군수는

[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초과 지급된 가족수당 2,980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탁기관에서는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비치하도록 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금에 대한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

강 원 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지도감독 소홀

기 관 명 ○○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군(&과¹⁷⁾)에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표 1]과 같이 ○○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였다.

[표 1] ○○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 현황

수탁기관	위탁기간	위탁사무 범위	위탁조건
사)○○협회 강원도협회 ○○군지회	2016.1.1.~2018.12.31.	- 차량관리 및 운영 - 이용요금 수납 등 회계업무 - 운행기록 대장 작성·관리 등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경비(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지원
사)▼▼협회 강원도지부 ○○군지회	2019.1.1.~2021.12.31.	"	"

1.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3장 12-3 민간위탁금에 따르면 민간 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위탁경비 산출 및 사후정산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해당사업의 특성상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17) 2019. 2. 12.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과에서 ◇과로 업무이관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미응찰 또는 1개 업체만이 응찰하였을 때에는 재공고를 실시하고 재공고 결과 1개 업체만 응찰하였을 경우 응찰한 업체에 대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적정성여부를 심사 받은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8. 12. 31. 기존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새로운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을 위해 2018. 12. 10. ○○군 공고 제2018-1245호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2018. 12. 17. ○○군 ◇◇ 연합회 @@ 협회(이하 @@ 협회라 한다)에서만 신청서를 제출하여 1개 업체만 응찰하였음에도 지방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 협회의 위탁기관 선정여부를 2018. 12. 21. 민간위탁선정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2018. 12. 31. “○○군 특별교통수단 사무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군(&과)에서는 민간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산정 비용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민간수탁자가 제출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리 계획서만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기관 사무편람 미작성

「○○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군(&과)에서는 수탁기관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편람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수당(직책수당)지급 부적정

2015. 12. 29. 체결한 2016~2018년 「장애인 콜택시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에 첨부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르면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가족수당, 시간외수당에 한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수탁기관인 지체장애인 협회에서는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운전원 2명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지급기준에도 없는 직책수당을 운전원 2명에게 월 200,000원씩 총 3개월간 1,200,000원을 [표 2]와 같이 잘못 지급하였고,

○○군(&과)에서는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여 2019. 7. 19. 감사일 현재까지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표 2] 2016년 2분기 운전원 인건비 지급 현황

(단위: 원)

구분	성명	총계	기본급	가족수당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퇴직금
4월	S	2,520,600	1,641,000	100,000	200,000	425,250	154,350
	T	2,512,600	1,693,000	40,000	200,000	425,250	154,350
5월	S	2,520,600	1,641,000	100,000	200,000	425,250	154,350
	T	2,512,600	1,693,000	40,000	200,000	425,250	154,350
6월	S	2,520,600	1,641,000	100,000	200,000	425,250	154,350
	T	2,512,600	1,693,000	40,000	200,000	425,250	154,350

※ ○○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군수는**

[시정] 운전원 2명에게 지급한 직책수당 1,200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수탁기관에서는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비치하도록 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금에 대한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센터 위탁심사 부적정 및 운영 지도·감독 소홀

기 관 명 □□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군(◎과)에서는 지역사회의 가족문제 사전 예방 및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보편적·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센터 위탁심의 부적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센터통합서비스 사업안내」(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하는 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모집공고는 지자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 일간지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수탁자의 자격, 위탁내용, 선정기준, 신청서류 등 제반사항을 최소 7일 이

상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법인이 1개소일 경우 재공모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1개소에 대해서만 심사하되 부적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계·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5명이상 7인 이내의 위원¹⁸⁾(위원장¹⁹⁾ 1명 포함)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사는 수탁응모자가 위탁 사업설명회를 통해 직접 참여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대상으로 심의하되 수탁응모자의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정기준²⁰⁾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계약기간,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3년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7조,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르면 군수는 소관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또는 기간연장 등 당초 동의 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3월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탁기관이 선정되고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하며, 사무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

18) 위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과반수로 구성

19)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간 호선에 의해 결정

20) 필수사항 : 사업수행능력(건가·다가센터 운영 실적 등), 재정능력, 공신력, 가족관련 사업 추진실적, 운영 계획 적정성, 센터장 및 직원 자격의 적정성/ 임의사항 : 그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람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작성·비치하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군수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를 매년 1회 정기평가와 위탁기간 종료 3월전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성과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재계약 심사 시 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심의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1] **○○군 ◆◆센터 민간위탁 현황**

□ 위탁경과

- 위탁계획 수립 : 2018. 11. 23.
- 의회 동의 : 미이행
-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 2018. 11. 26.~12. 7. (12일간) *재공고 : 2018. 12. 10.~12.17.
- 위탁 심의 : 2018. 12. 27.
 - ※ 심사위원회 : 위원장 부군수, 위원 5명(사회복지담당공무원 1, 군의원 1, 관련 민간 전문가 3)
- 기존사업 성과평가 미이행 및 성과평가결과 미공고, 선정심사 미반영
- 위탁운영자 선정 공고 : 2018. 12. 27.

□ 위수탁협약 : 미상(협약서 날짜 미기재), *공증 : 미이행

- 위탁기간: 2019. 1. 1. ~ 2021. 12. 31.(3년)

□ 수탁자 : (사) ○○군# #회(회장 U) * 2018년 센터사무 기존 수탁자

□ 위탁대상 : ○○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운영 및 사업수행 전반 (사무위탁)

- ※ 위탁시설 : ○○군 갈말읍, ○○군# #회 소유 건물

□ 사업예산(2019년) : 247,500천 원(인건비 138,467, 운영비 25,915, 사업비 83,118) / * 사회복지사업법정운영비(307-10)

- ※ 위탁비용 : 보건복지부 사업비 예산 내시에 의한 보조금

그런데 ○○군(☉과)에서는 [표 1]과 같이 ○○군 ◆◆센터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면서 ①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② 사업 성과평가를 미이행하고 선정심사에 미반영하였으며, ③ 위수탁협약 체결 후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지 않

았고, ④ 수탁자 선정 심사를 하면서 [표 2]와 같이 선정기준에 필수적으로 포함 되어야 하는 센터 직원 자격의 적정성 등을 심사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등 심사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

[표 2] ○○군 ◇◇센터 민간위탁 심사표

심사항목	운영계획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및 관련사업 수행실적	센터장 자격 적정성	센터의 지리적 위치	시설의 적정성
배점	25	30	10	10	25

※ ○○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2.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센터의 모든 수입 및 지출관리는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며 예산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와 계좌이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출결의서는 내부 결재를 득하되 지출내역은 6하 원칙에 맞추어 기재하고, 예산 집행 시 청구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표 3]과 같이 센터에서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과목별로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등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3] 2018년 세출예산(보조금) 부적정 집행 현황

(단위 : 원)

보조 세목	년월일	적요	지출금액	집행 부적정 사유	비고 (적정보조세목)
기관 운영비	2018.2.28	직원채용 면접후 급양비	168,000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기타운영비
	2018.4.23	직원워크샵 급양비	143,000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기타운영비
	2018.12.20	상장케이스 구입	440,000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수용비 및 수수료
	2018.12.28	4분기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간담회비	302,000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지출품의(6하원칙에 따라 미작성) 부적정	회의비
제세 공과금	2018.2.7	센터차량 과태료	12,000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회수대상
자산 취득비	2018.4.27	사무용 집기구입비	390,000	타인견적서 미첨부	
	2018.6.28	에어컨수리비	224,000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시설장비유지비
	2018.7.24	센터교육실 전등교체비용	594,000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시설장비유지비
	2018.11.23	센터 사무실 전등교체	231,000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시설장비유지비
	2018.12.20	노트북 구입	1,159,000	타인견적서 미첨부	

※ 회계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예산편성 과목 및 내역(지침) 별첨

3. 종사자 호봉 확정 및 급여 지급 부적정

「2015년 ○○센터 사업안내」(여성가족부) 및 「회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제14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직원경력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호봉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경력의 인정은 ○○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경력은 100% 인정하며, 사회복지사 또는 건강가정사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100%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부담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며,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 하여야 하며,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하고,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표 4]와 같이 센터에서 종사자의 이전 경력에 대한 호봉 확정 시 관련 지침에 근거 없는 경력을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4] ○○군 ◆◆센터 종사자 경력인정 현황

(단위 : 원)

시설명	대상자	경력인정사항				급여지급 내역 (2015. 7월~2019. 6월)	
		근무기관	근무기간	인정 기간	인정율 (%)	차 액 (회수금액)	8,272,260
○○군 ◆◆센터	V (‘89.1.21.)	○○군 ♫♫센터	2012. 3. 2. ~2015. 5. 31.	3년 2월	100	경력인정 후 급여	97,567,080
						적정 급여	89,294,820

※ ○○군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세부내역 별첨

조치할 사항 ○○군수는

[시정] 센터 종사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급여 8,272,260원 및 센터차량 책임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로 지출한 12,000원 등 부적정하게 지출한 보조금 총 8,284,26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시설 민간위탁 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정해진 절차대로 위탁심사를 하시고, 센터에서 세출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및 집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